

월요광장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혼자 사는 사람의 일상을 보여 주는 ‘나 혼자 산다’를 필두로 혼자서 술을 즐기는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혼술남녀’ 그리고 혼자 사는 남성 스타의 생활을 조명하면서 관찰자로 그들의 엄마를 내세운 ‘다시 쓰는 육아일기-미운 우리 새끼’가 요즘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연예인들이 그냥 혼자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왜 재미가 있을까? 아마도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도 혼자 살면서 저런 것이 불편했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등등 공감과 대리만족으로 만들어진 6% 시청률이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만 해도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9.0%에 불과했으나 2010년 23.9%로 급증했고

법조칼럼



김 하 중
변호사

끝내 대통령은 탄핵의 길을 택했다. 750만 시민이 촛불을 켜고 하야를 기원했지만 대통령은 헌법을 방패 삼아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을 선택했다. 스스로 헌법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해 왔으면서도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헌법 뒤로 숨는 모양새다.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다짐한 헌법수호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국가와 국민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살길만 찾는 모습이 세월호 선장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만신창이가 되기를 바라는가? 이미 국정의 상당부분이 정체되어 있고, 공직기강도 느슨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고립되어가고 있다.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이제 겨우 인간답게 살만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장차 무

기 고



양 세 영
한국청렴연구원 원장·홍익대 겸임교수

최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남은 종합청렴도 6.65점을 기록하여 17개 시·도 가운데 17위(5등급)를 차지했다. 2014년 13위, 지난해 16위에 이어 꼴찌의 오명을 안게 됐다. 이는 이미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해 전남은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청렴도 결과를 놓고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부패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국민권익위의 청렴 컨설팅 등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자 하는 외형적인 대응이었을 뿐 청렴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지속적인

싱글족과 N포세대 그리고 힐링 코드

작년에는 27.2%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소포장·반조리 등 주로 간편식 선호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싱글족을 위한 심부름 서비스, 세탁·정소 대행 서비스, 안전·보안 서비스 등도 등장했다.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친 음식점도 있으며, 아예 1인 주점도 있다. 1인용 소형 가전, 1인용 가구도 있다. 규모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 부문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3.85%로 모든 주택 규모 중 몸값이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편의점 이용 금액 증가율은 대형마트를 앞질렀다.

공연업체는 여가를 즐기는 싱글들에게 공연 할인 혜택을 주고, 여행업체는 혼자 떠나기 좋은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1인 가구 수가 급증하는 만큼 잠재력도 크며, 관련 시장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1인 가구의 세대가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상환, 기약 없는 취업준비, 치솟은 집값 등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루는 ‘청년층’으로 정의되는 삼포 세대와 강하게 교차된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

원인은 저성장에 따른 취업난, 이혼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그리고 고령화라고 한다. 최근에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에 적응하는 일본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사토리 세대’(탈관한 것처럼 욕망이 없는 세대)가 등장했다. 사토리 세대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현실성’과 ‘합리성’을 들고 있지만 이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일본의 장기 불황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도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힐링’(healing) 코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1인 가구의 증가가 힐링 코드와 직접적인 상관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3포 세대와 힐링 코드는 직관적으로 보아도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힐링이 각광받고 있는 건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빈부 격차와 실업 문제, 부와 복지의 비이상적 분배에 따른 세대 간 및 계층 간 갈등도 사람들이 더욱 힐링을 갈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더욱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기대수준은 자꾸만 높아지는 실패에 대해 용인하고 재도전을 격려해 주는 문화도 확립돼 있지 않다.

힐링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지향적

이고 발전적인 개념인 데 비해 힐링은 상처받은 현재의 심리 상태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과거지향적이고 회귀적인 특성이 강하다. 한국 사회에서 웰빙의 자리를 힐링이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위 욕구(예:안전에 대한 욕구)들이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힐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감정의 스펙트럼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넓다. 힐링의 접근 방법은 ‘동병상련’의 태도가 중요하다. 모든 문제를 “만약 이게 나의 문제라면 그냥 내버려 두겠는가”라는 관점에서 공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나 힐링은 그 자체로서는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더 나은 미래, 즉 웰빙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변화의 일상화 한가운데 서 있는 오늘날의 우리는 아프다. 오프 세대는 삼포에 더해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세대, 그리고 힐포 세대는 오프 세대에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세대로도 한다. 꿈과 희망이 포기된 사회는 더 이상 기댈 게 없는 사회이다.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는 지도자가 아닌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 주는 지도자를 원하며, 힐링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웰빙사회에서 살고 싶다.

社 說

대통령 탄핵 ... 시민이 이룬 위대한 촛불 혁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2106년 12월 9일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4·19 혁명과 6월 항쟁에 이은,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이정표라 하겠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랑스러운 새 역사를 쓰게 됐다는 점이다. 돌맹이 하나 던지지 않고 이뤘 낸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민 혁명이자 명예혁명이요 위대한 촛불 혁명이다.

국회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분의 2를 훌쩍 넘는 찬성으로 가결했다. 총 투표 299명 가운데 찬성 234명, 반대 56명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것이다.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을 배반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 대표기관의 엄정한 심판이다. 또한 분노의 촛불로 광장을 가득 메우면서도 평화를 지킨 성숙한 시민들이 이뤄낸 위대한 승리다.

현재 최대한 빠른 결정을

따라서 이제 현재가 국민적 열망에 화답해야 할 때다. 현재는 주심 재판관을 결정한 뒤 휴일인 어제도 재판관 다수가 출근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오늘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탄핵 심판 결정이 본격화된다. 국민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현재로 향하고 있다.

정치권 혼란 수습 힘써야

박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을 어겼다. 사인에 불과했던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치하고, 국가기관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그동안 거짓 해명과 진정성 없는 사과로 일관해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던 박 대통령은 중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이어 현재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로 과도기적 혼란과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 당장은 외교와 국방 치안 문제는 물론이고 심각한 민생과 경제 상황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촛불 민심은 단지 박 대통령 탄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폭발시킨 기폭제였다. 이러한 점을 되새기면서 이제 여야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쟁점을 떠나 나라를 살리는 데 진력해야 한다. 특히 야3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탄핵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엄중한 상황을 외면하고 경솔한 행동을 계속하면 한 순간에 촛불 민심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 후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면 서도 퇴진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자진사퇴함으로써 정국 혼란의 조기 수습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현재로서는 헌법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현재 최대한 빠른 결정을

따라서 이제 현재가 국민적 열망에 화답해야 할 때다. 현재는 주심 재판관을 결정한 뒤 휴일인 어제도 재판관 다수가 출근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오늘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탄핵 심판 결정이 본격화된다. 국민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현재로 향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주말에 열린 7차 주말 촛불집회의 화두도 단연 현재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현재가 국민의 뜻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 시선이 현재로 향하는 이유는 현재가 탄핵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의견으로 탄핵안을 결정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더라도 헌재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무효가 돼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민은 현재가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빠른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최장 6개월까지 끌 것이 아니라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 특히 경제와 안보의 불안정성을 감안한다면 최대한 심리를 빨리 진행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개인은 국가든 사이가 틀어지거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은 의외로 사소한 이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고려 말 무신 집권기의 일이다. 최고 권력자인 이의민의 부하였던 최충헌은 이의민을 직접 살해하고 권력을 차지한다.

그런데 최충헌은 치밀한 쿠데타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결단을 통해 최고 권력자를 죽이고 권력을 손에 쥐었다. 최충헌은 왜 이의민을 죽였을까? 직접적인 이유는 한 마리의 비둘기 때문이었다. ‘고려사’에는 최충헌과 그의 동생 최충수가 이의민의 제거한 것

만다.

분노를 참지 못한 최충수는 그 길로 형 최충헌에게 찾아가 이의민 부자들을 제거하자고 충동질한다. 며칠 후 최씨 형제는 이의민이 별장으로 놀러간 틈을 이용해 이들의 제거에 성공한다. 이후 최씨 형제 세상이 되지만, 권력 다툼으로 인해 형제는 싸움을 벌였다. 결국 최충헌이 동생마저 없애고 모든 권력을 차지한다.

비둘기와 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자세히 알리지게 된 이후 중하나라 애완동물로 인해 씨와 고양테 씨가 다투기 때문이라는 애완동물로 길렀던 비둘기를 이의민의 아들에게 뺏긴 게 계기가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196년(명종 26년) 최충수가 동부북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성격은 호탕했지만 비둘기 기르기를 아주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의민의 둘째 아들 이지영이 최충수의 집에 놀러왔다가, 그가 애지중지하는 비둘기를 훔쳐 갔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최충수가 이 지영에게 찾아가 비둘기를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비둘기를 돌려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모만 당하고

려지게 된 이후 중하나라 애완동물로 인해 씨와 고양테 씨가 다투기 때문이라는 애완동물로 길렀던 비둘기를 이의민의 아들에게 뺏긴 게 계기가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196년(명종 26년) 최충수가 동부북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성격은 호탕했지만 비둘기 기르기를 아주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의민의 둘째 아들 이지영이 최충수의 집에 놀러왔다가, 그가 애지중지하는 비둘기를 훔쳐 갔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최충수가 이 지영에게 찾아가 비둘기를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비둘기를 돌려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모만 당하고

전남의 청렴도를 높이려면

노력과 모니터링이 취약하였다. 올해 추진했던 대책들도 사실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차별점이 없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결과와 이 같은 반성이나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입증한다.

청렴도는 내부 공직자와 외부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고객평가 점수로 부문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을 낸 뒤 부패사건 등 감점요인을 반영한 점수다. 전남은 내부 청렴도(7.60점)에 비해 외부 청렴도(6.97점)가 낮아 청렴도 저하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도민이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갖는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공역 관련 평가에서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향응접대를 직접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주요 요인이었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청렴 대책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부정부패 근절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실제적인 부패상대를

측정하기보다는 내외부 고객들의 그 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을 반영하는 성격이 크다. 소속 공직자들의 분발과 노력, 정교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에 따라 최하위 기관이 최상위 기관으로 청렴도가 향상된 사례도 있고 반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전남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렴도 성과는 결국 도지사와 간부진들의 의지에 의해 달성되는 측면이 크므로 청렴 1등 전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부패 메시지를 전달하고 현장 공직자들을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청렴소통을 강화하여 청렴의식을 내면화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민원인과 접점이 되는 일선 공직자 중에는 아직도 청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측정기간 중 부패사건 발생은 청렴도 저하로 직결되므로 부패예방 시스템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가동해야 한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산하기관 인사개입, 공사관리 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원인의 외부청렴도 평가는 공직자의 친절도, 업무추진에 따른 만족도가 투사되어 응답될 가능성이 크므로 민원 부서사의 친절도와 고객만족 도록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렴도 제고의 집중적인 목표관리를 위해 콘트를 타워 조직이 확립되어야 한다. 안이한 탈피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청렴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렴도 제고는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도청 공직자 전원이 팀워크를 발휘할 때 달성이 가능한 목표이므로 2017년 초부터 청렴 범업을 일으키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변화관리 차원의 프로그램 실행이 요청된다.

목민심서의 고향이자 나라의 으뜸이었던 호남 청백리의 전통이 서린 전남은 언젠가 반드시 대한민국 청렴수도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호남의 자부심을 되찾는 의미도 있지만 지속적인 국내의 기업유치와 예산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제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